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KIHASA-OECD 공동연구 결과 발표
(*Korea's Unborn Future*(OECD) 발간 기념 공동세미나 발표)

☐ 과제명

- [지원25-003-00]연구기획

☐ 출장기간

- 2025.03.01.(토)~2025.03.08.(토)

☐ 출장국가(도시)

- 프랑스(파리)

☐ 출장자

- 최선영 부연구위원, 함선유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3.1	대한민국(인천)	출국		
3.2	프랑스(파리)	노보텔 센터	임박네 박사	프랑스 가족정책 현황 논의1
3.3	프랑스(파리)	OECD	이종미 연구원	프랑스 가족정책 현황 논의2
3.4	프랑스(파리)	OECD	Jon Pareliuseen	OECD-KIHASA 공동세미나 사전회의
3.5	프랑스(파리)	OECD	Jon Pareliuseen 외	OECD-KIHASA 공동세미나 발표
3.6	프랑스(파리)	OECD	Vincent Koen	KIHASA-OECD 공동연구 후속과제
3.7	프랑스(파리)	귀국		
3.8	대한민국(인천)	입국		

2 출장 주요내용

①	
일 시	3.2 (일요일) 16:00 ~ 18:00
장 소	파리(노보텔 센터)
참석자	임박네(독립연구자), 최선영(KIHASA), 함선유(KIHASA)
<p><프랑스 가족정책 현황></p> <p>○ 육아휴직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은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사용 후 동일 직종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영업자 역시 사용가능함. - 육아휴직제 급여는 중위소득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 수당은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낮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용한다면 여성이 사용하는 비중 높음. - 육아휴직 대신에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음. 육아휴직제를 파트타임의 형태로 많이 사용함. 자신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받음. - 육아휴직 시에 대체근무자나 조직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분위기는 아님. <p>○ 유아교육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에서 3세부터 의무교육이며, 유치원, 초등학교가 교육시간이 같음. 일과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정규수업임. 일찍 하원하는 아이들은 4시 반에 하원하고, 부모들은 80~90%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6시 또는 6시 반에 하원을 함. - 프랑스에서 교육과 보육은 분리되어 있는데, 교사는 교실에서 공부만 가르치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방과 후 시간은 돌봄 선생님들이 전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명확한 편임. -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 역시 수업은 교실에서, 수업 이후 방과후 시간은 돌봄 강당에서 이뤄짐. 큰 강당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선생님을 통해 이뤄짐. - 교사의 경우 교육부 소속이며, 방과 후 선생님들은 시에 속한 공무원임. - 프랑스에서 3세부터 다니는 학교를 유아학교라고 부르며, 이 제도가 1800년대부터 지속되어 옴.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아이들이 상당히 장시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에서는 거부감이 거의 없음. 이는 국가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방학은 7주에 한 번씩 2주간 방학이 있는데, 방학돌봄이 가능함. 방학돌봄의 수요가 높 	

지 않으면, 지역을 단위로 통합하여 다른 학교에서 진행되기도 함.

- 한국에서 아이를 6시까지 외부에 맡기기 위해서는 방과 후에 다양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프랑스 보육과 다른 점임.
- 프랑스에서 학원이나 과외는 많지 않고, 이를 하더라도 2-3개월 정도 필요한 과목에 한하여 잠시 학습 도움을 받기도 함. 이러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함.

○ 프랑스의 가족 정책의 최근 동향

- 프랑스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성공적이었던 것이 70년대임. 현재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유럽에서 가장 높기는 하지만, 2003년, 2022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그 원인을 성 불평등으로 보고 있음. 1970~80년대에는 여성들이 일도 하고 집에서 아이도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왜 내가 나의 일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도 봐야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생겨남. 그래서 프랑스에서 성평등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성평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이 많이 생겨났고, 한부모에 대한 지원 역시 중점에 두고 있음.
- 프랑스에서 여성정책은 별도의 장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부처에서 성평등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임. 육아휴직의 경우도 남성들이 무조건 3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프랑스 기타 사회정책 현황>

○ 프랑스의 조세제도 및 현금지원

- 프랑스의 경우 한국과 세금이 완전히 다름. 혼자 살 때와 함께 살 때, 자녀가 있을 때 모두 세금이 다르게 적용됨. 결혼이 아닌 동거라도 똑같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부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혜택이 큰 데 첫째와 둘째까지는 비율이 같지만 셋째부터는 세액공제 비율이 매우 높음.
- 고소득 가구의 경우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나, 고소득 가구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을 고정하였음.
- 프랑스의 경우 아동수당은 둘째부터 주고 있음. 둘째부터 20세가 될 때까지 줌. 보편수당인긴 하지만 소득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제일 많은 가정은 최고가 180유로, 최저는 30유로임.
- 프랑스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다양한 지원이 이뤄짐. 또한 그 지원이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혜택이 많아짐.
- 프랑스에서도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노동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의욕을 낮추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음. 마크롱 정부에서는 그래서 기초보장제도 수급 시 근로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저소득층에 현금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여성의 고용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의 경우 본인 소득의 4.5~6.5%를 내도록 설정되어있음. 통상 시설의 경우 첫째 아이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입소 자체가 어려운데, 최근 10년 전부터는 저소득층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할당을 높이고 있음.

②	
일 시	3.3 (월요일) 16:00 ~ 18:00
장 소	파리(OECD)
참석자	이종미(OECD), 최선영(KIHASA), 함선유(KIHASA)

<프랑스 가족정책 및 주요 사회 정책 현황과 실제 활용 사례>

○ 육아휴직제도

- 프랑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급여 수준이 400유로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
- 통상 4개월의 출산휴가 이후 보육제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보육제도

- 프랑스에서는 국가 승인 전문 보육모라는 제도가 있음. 보육모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의 대상이 됨.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의 우려는 별로 없는 편임.
- 1:1 보육의 경우 가정에서 부담이 너무 크고, 4:1 정도임.
- 프랑스에서 보육서비스 이용료는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음. 저소득층의 경우는 전문 보육모를 고용해도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많지 않음. 다만, 고급 서비스의 경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개인이 보육서비스를 고용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되고 있음. 다만, 세액 공제의 상한선이 한 아이당 2300유로 정도임.
- 보육서비스 종사자는 주로 유색인종으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어렵지 않은 편임.
- 보육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6시에 아이를 찾음. 한국에서는 4시까지만 정규 프로그램이고 4시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에 4시부터 6시까지 보육의 질이 적절하지 않아 보였음.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 프랑스의 노동시간 및 근로 환경

- 프랑스에서 법정근로시간이 35시간임. 5시면 보통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찾으러 가기 충분한 시간임.
- 보통은 야근이 없고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만, 일반근로자가 이에 해당하고 고위직들은 이 법의 적용이 되지 않음. 프랑스 고위직은 일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임금 노동자면 5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아이들 보육이 이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음.
- 주 35시간이 정규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출산이나 아이를 낳았다고 추가로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가 엄청 활발해졌음. 사무직들은 재택근무를 많이쓰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회사 내규에 따른 것임.

<p>○ 프랑스의 동거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 제도의 경우 애초에 도입된 배경에는 동성 커플에 대한 인정이 있었음. 당시 프랑스도 카톨릭 국가이다보니 반대가 많았으나, 이 제도가 동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성 커플도 다양해져가는 사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통과되게 됨. - 이러한 동거에 대한 인정은 복잡한 이혼의 과정이 있는 결혼에 비하여 간단하기 때문에 더 쉽게 커플이 될 수 있고, 조세가 커플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음. 예를 들어 동거 중인 파트너가 학생일 경우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대부분을 면제받게 됨. 	
③	
일 시	3.4 (화요일) 13:00 ~ 14:00
장 소	파리(OECD)
참석자	최선영(KIHASA), 함선유(KIHASA), Jon Pareliuseen(OECD), 황현정(OECD)
<p><세미나 사전 준비></p> <p>○ 단행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내용 공유 - 공동연구 결과 이외, Economic Survey 관련 내용 확인 <p>○ 세션별 발표내용 조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 1과 세션 2에서, KIHASA 연구자들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함. - 단행본에 포함되지 않은 최근 동향도 일부 소개함. - 인구동향에서 최근 합계출산율 반등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지 않기로 함.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늘봄학교 등 최근 일-생활균형 정책 변화 내용도 소개함. 	
④	
일 시	3.5 (수요일) 9:30 ~ 13:00
장 소	파리(OECD)
참석자	최선영(KIHASA), 함선유(KIHASA), 최상대(OECD대표부 대사), Luiz de Mello(OECD), Jon Pareliussen(OECD), Willem Adema(OECD), Laurent Toulemon(INED), Isabell Koske(OECD), Yoonyoung Yang(기획재정부), Tomas Sobotka(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곽상현(기획재정부), Alvaro Pereira(OECD) 외

<세미나 일정>

09.00 - 09.30	Registration & Coffee
09.30 - 10.00	Welcoming remarks Álvaro Pereira, Chief Economist, OECD Congratulatory remarks Sangdae Choi,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Korea to the OECD Opening remarks (virtual) Hyekey Kang, Vice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0.00 - 10.10	Photo Session
10.10 - 11.30	Session 1: Changing fertility behaviour and underlying causes of low fertility
Moderator	Luiz de Mello, Director, Country Studies Branch, Economics Department, OECD
Presenters	Jon Pareliussen, Korea/Sweden desk head, Economics Department, OECD Sunyoung Choi, Research-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iscussants	Willem Adema, Head of social spending, housing, gender, family and child policies unit,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OECD Laurent Toulemon, Senior Researcher, INED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11.30 - 12.50	Session 2: Policies to address low fertility and work-family conflicts
Moderator	Isabell Koske, Deputy Director, Country Studies Branch, Economics Department, OECD
Presenters	Yoonyoung Yang, Director,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Korea Sunyu Ham, Research-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iscussants	Tomáš Sobotka, Deputy Director,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Sang Hyun Kwak, Director, Future Vision and Strategy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Korea
12.50 - 13.00	Concluding remarks Álvaro Pereira, Chief Economist, OECD

<세미나 주요 내용>

□ 세션1: 출산 행동의 변화와 저출산의 배경 요인

○ 발표1: Jon Pareliussen (OECD)

-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됨.
-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역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국의 이상적인 자녀 수는 지난 10여년간 거의 줄어들지 않아, 이상적인 자녀

수와 출산율 사이의 갭이 생겨나고 있음. 이러한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일-가정 사이의 trade-off가 이뤄지는 국가와 이뤄지지 않는 국가들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이러한 trade-off가 높은 국가임.
- 한국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할 때 남성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정당하다는 문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의 젠더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기술과 숙련 수준에 비례한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

○ 발표2: 최선영 (KIHASA)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에서 1983년 2.1로 13년 사이 상당히 가파르게 줄어들었음. 1990년대 안정기와 일시적 반등기 이후 2002년 1.18이라는 새로운 저점에 이르렀음. 2010년대 1.3으로 일시적 반등함. 첫 결혼 연령의 상승과 다자녀 출산의 감소가 합계출산율 감소에 기여함.
-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은 더 가파르게 줄어들어 2023년 0.72를 기록하였음. 혼인이 감소하였으며, 1번째 출산과 2번째 출산도 줄어들었음. 한자녀 가구가 주류가 되었으며, 자녀가 없는 커플의 비중도 증가함.
- 한국에서 혼인과 출산이 거의 의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음.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이러한 생애 사건의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였으나 출산은 시간이 지나도 코호트 내에서 회복되지 못함. 혼인과 혼인 후 최소 한 자녀라도 낳아야 한다는 믿음은 상당히 약화됨.
- 지난 20여년간 출산율은 상당히 가파르게 줄어든 반면, 여성의 고용율은 느리게 증가함. 또한 젠더 고용 갭은 여전히 큰 상황임. 2000년 15세 이상 여성의 고용 격차는 23.8%포인트였으며, 2023년에는 17.2%포인트로 줄어들었음. 이는 한국 사람들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여성들은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됨. 2010년대 중반까지 여성은 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보다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을 선택하였음. 첫 번째 출산 시 고용가능성은 45%가 줄어들었음. 그러나 그 이후로 여성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혼인이나 출산 보다 우위에 놓는 비중이 늘어남.
- 2000년대까지 혼인한 여성의 노동공급은 여성 자신의 임금과 남편의 임금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나, 2010년대 이후 혼인한 여성의 노동공급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 덜 반응적이 됨.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이 줄어들었으며, 여성들은 개인적 일-가족 선호에 따라 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짐. 고용 정책과 일자리 특성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 중 한국은 젠더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히 출산 이후 노동시장 참여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됨. 여성은 동일한 학교, 전공, 성

적에도 불구하고 커리어 초기에도 남성에 비하여 17.4%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교육 및 직업 선택의 격차는 임금 격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여성은 고용 및 직업 분배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젠더 임금격차에 기여함. 공공부문에서 젠더 임금격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강력한 법적 고용 컨트롤이 있기 때문임.

- 젠더 임금 격차는 20대 후반부터 경력단절과 상관없이 연령과 함께 늘어나며, 고용주는 여성이 경력단절 될 것을 기대하여 통계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격차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지속시키며, 종종 가족들이 여성보다 남성의 경력을 우선시하게 만듦.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임. 공적 개입 없이는 이 악순환을 끊기 어려움.
-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용 상태는 여성의 총 출산 수를 감소시키지만, 이 효과는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에게서만 관찰됨. 고용 안정성과 근무 시간은 첫 번째 자녀 출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직장의 종류나 규모는 영향 없음.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두 번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용 중단은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자 바람직하지 않은 부담으로 여겨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더 이상 한국에서 결혼, 출산, 돌봄을 가능케 하지 않음. 효과적인 정책은 성별 차별을 해결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지원이 필요함.

○ 토론1: Willem Adema (OECD)

- 한국의 저출산은 그 감소 속도가 매우 크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추세이기는 함.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50년간 출산율이 급감하였음.
- 한국의 출산율 감소에서 특이한 점은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달리 20대의 출산율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임. 호주와 일본에서도 출산율이 줄어들었으나, 한국만큼 20대 출산율을 중심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었음.
- 한국 청년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20-29세 청년 중에서 부모랑 함께 사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임. 2022년 기준 한국에서는 80% 가까이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의 50%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아동에 대한 가족정책의 지원은 상당하지만,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다만 현재 보고서에서 언급하듯, 가족 정책만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움.
- 정책의 역할로는 보다 젠더 평등하게 일과 자녀 양육이 분배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기 동안 육아휴직, ECEC와 잘 디자인된 세금 및 현금 지원을 통해 가능함.
- 교육 경쟁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구매가능한 사회주택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저출산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이민이나 노동시장에 낮게 대표되는 집단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사회정책의 범주를 넘어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토론2: Laurent Toulemon (INED)

- 출산율 감소의 일반적인 원인: 여성의 교육수준과 고용 향상, 맞벌이 부부의 비율 증가, 혼인의 감소, 젠더 평등에 대한 요구 증가, 이상적인 가족사이즈 감소, 가족 계획 방법의 가능, 젊은 성인의 출산율 감소, 어머니 이외에 다른 삶의 지향, 혼인 파탄, 재혼 등
- 일반적인 출산율 추세: 세 번째 출산의 감소, 다음으로 두 번째 출산의 감소, 다음으로

는 첫 번째 출산이 감소함(첫번째 출산의 지연).

- 그러나 한국은 감소는 훨씬 심각하며, 낮은 출산율 측면에서 이상치 국가가 됨.
-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었으며, 절반의 노동자는 비정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유연성이 없는 긴 노동시간을 나타냄. 육아휴직 사용은 부모의 커리어와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며, 연령에 따른 노동력 참여가 M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큰 젠더 고용 갭과 젠더 소득 갭이 나타남.
- 한국에서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은 매우 높음. 또한 사적인 튜터 비용이 상당히 높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고용의 격차가 크지 않고, 전공과 실제 일과의 미스매치가 나타남.
- 주거 부족이 있으며, 소셜 하우스 공급은 열악함. 아동돌봄은 0-2세에 매우 높음.
-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은 편이며, 혼인 밖 출산은 매우 드문 편임.
- 한국에서 일-생활의 밸런스와 젠더 불평등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임. 노동시장 이중성은 여성의 일-생활의 밸런스를 어렵게함. 낮은 출산율은 여성으로하여금 커리어와 가족을 병행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의 한 증상임. 또한 젠더 평등에 대한 여성의 높아진 요구에도 남아 있는 차이와 차별이 있음.
- 젠더 평등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포괄적인 가족 정책이 필요하며 모든 가족과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함. OECD 국가 중 여전히 아동당 지출은 낮은 수준임.
- 젊은 이들에게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도구와 확신을 줄 필요가 있음. 가족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함. 보다 젠더 평등한 유급 노동과 돌봄 역할에 대한 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션2: 저출산과 일-가정 갈등에 대응한 정책

○ 발표1: 양윤영 (기재부)

- 가족정책은 현금, 보육, 휴가권을 제공하여 일-커리어의 트레이드 오프를 직접적으로 줄여줌.
- 짧은 노동시간과 유연성, 직업의 안정성은 가족과 커리어를 조화를 더 쉽게 함.
- 사회적인 규범은 가정과 돌봄 의무를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나누어야할지에 영향을 미치며, 커리어와 자녀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침.
- 그 외에 가족 형성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 예를 들어 주거와 교육 등이 일-커리어 트레이드 오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한국의 가족정책 지출은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0여년간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 한국에 맥락에서 소득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재정적인 지원 보다는 ECEC와 휴가 지원이 더욱 중요함.
- 한국에서 공공보육의 비중이 낮고, 직장어린이집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보육을 질적인 측면에서 강화할 수 있음.
- 한국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율은 높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 육아휴직자의 비중은 낮은 편임.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대응은 잠재적인 부모의 재정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연안전성 강화 방안과 기업간 생산성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엄마가 일하는 미취학 자녀는 고통을 받는다는 문항에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임. 보다 성평등한 부모 책임의 분배가 출산율 추세를 뒤집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주택 가격과 사적인 교육 지출은 한국에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비용지원이 필요하며, 골든 티켓 진드롬을 줄이는 정책은 사적 교육 지출을 줄일 수 있음.

○ 발표2: 함선유 (KIHASA)

- 최근 20년간 한국에서 다양한 가족 정책들이 도입됨. 다양한 가족 정책이 단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면서 제도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기 어려움. 따라서 연구 결과는 항상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최근 10년간 가족정책이 여성의 고용과 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 결과를 소개함.
- 한국의 미취학 아동 보육 제도는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양육자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0세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중이 높으며, 1세 이후로는 시설 보육 비중이 높음. 국공립보다는 사립 시설 비율이 높음.
- 양질의 저렴한 보육 서비스는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현금수당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영향을 줄 수 있음. 2013년부터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이 동시에 시행됨. 이로 인해 두 제도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려움.
- 다만, 김태일(2022) 연구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육료 지원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함. 분석 결과, 보육료 지원이 노동 참여를 증가시키지 않음. 오히려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과 노동 참여가 감소함. 이는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노동 공급 감소 확인함.
- 민규량과 이철희(2020) 연구에서도 보육 정책 확대가 보육 시설 공급률이 높은 지역의 어머니들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지 못함. 다만, 보육시설 입소가 유리한 다자녀 어머니들의 경력 유지에 영향을 미침. 결론적으로 보육 정책 확대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여성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다자녀 여성들의 경력 유지에만 영향을 미침.
-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은 가구의 비근로 소득 증가로 인해 여성의 노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보육 지원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 지역에서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짐.
- 육아휴직 제도는 대상 아이 연령 확대, 급여 인상 등 개선됨. 최근에는 부부가 함께 제도를 사용할 경우 더 높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성평등성 강화. 다만 육아휴직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근로자로 제한됨.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음,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낮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낮음. 종합하면, 육아휴직 제도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함.
- 육아휴직은 단기적으로는 여성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복귀율을 높임. 그러나 한국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원직장 복귀율은 낮음. 사후 지급금 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원직장 복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기업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으나, 복귀율은 낮음.
- 육아휴직 이후 복귀율 저조한 이유는 업무와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복귀율에 영향을 미침. 직장 복귀 후 전일제를 위한 자녀 돌봄 시간표 마련, 자녀 질병 등으로 잦은 휴가

사용 등 경험함. 조직 내부의 불편한 시선, 낮은 근무평정도 문제로 밝혀짐.

- 현금 지원 제도에는 가정양육수당, 자녀 세제 혜택, 다양한 일회성 지원금이 있음. 현금 지원 제도는 출산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성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저소득층에서는 현금 지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 저소득층에서 현금 지원이 여성의 노동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종합하면 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출산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의 출산은 고용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고용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은 양육자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 노동 정책적 개입이 중요해짐. 돌봄 정책이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 또한 제도의 활용은 계층적이며,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성평등 강화를 위한 아버지 육아휴직 지원의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토론1: Tomas Sobotka(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 한국의 출산율 감소 추세는 동아시아 국가의 추세와 싱크되어 있음.
- 현재 첫째 출산을 미루는 경향은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연된 결혼과 늦은 부모됨은 무출산과 자녀없음을 함축함.
- 혼인 관계 내에서 자녀가 없는 비율은 1970년생 여성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 한국에서 대부분의 성인 청년들은 이성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음. 결혼하지 않은 20-29세 여성과 남성 중 데이트하는 파트너가 없다는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설문에서 혼인의사가 없다는 20-29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에서 젠더 전쟁이라 불리는 젠더 갈등은 반 가족적인 정서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2010년대부터 미소지니와 페미니즘, 젠더 차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었으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의도가 확산됨.
- 또한 한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미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화되었으며, 경쟁 압박 역시 높은 상황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낮은 출산 의도와 연결됨.
- 또한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서울의 집값이 상당히 높게 상승하고 있음.
- 유럽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자녀를 갖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불평등과 높은 집값,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
-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보다 다양한 가족 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는 혼인한 여성이나 커플에만 정책적인 지원이 가지 않도록하는 것을 의미함.
-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와 가족 선호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정책이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젊은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남성을 넘어섰으며, 이는 커리어에 대한 열망, 부모됨의 지연, 평등에 대한지 및 파트너 선호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동시에 여성이 커리어와 부모됨 사이의 갈등을 더 크게 겪을 수 있음.

- 경제적 불안정성은 가족 형성에 핵심적인 요인이며, 지연된 부모됨은 출산 의도의 실현을 더 어렵게 함.
- 가족 정책은 보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고용과 육아휴직, 보육 등에 있어서 유연성과 선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부모의 유강휴직 접근이 필요함. 주거의 부족과 가격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교육 경쟁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압력과 젠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
- 늦은 나이에 출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IVF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 정부를 벗어나 지역 정책 역시 필요함.
- 저출산의 위기나 긴급성에 대한 논의는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토론2: 곽상현(기획재정부)

- 한국에서 저출산 관련 거버넌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기타 부처가 역할을 하고 있음.
- 정책의 방향은 장기의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단기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재정 및 조세 정책과 복지 정책, 노동 및 이민 정책이 다차원적으로 이뤄짐. 또한 중앙 정부와 관계부처, 연구 조직 등 정부 전체가 대응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고령자의 노동을 독려하고, 이민을 확장하고자 함.
- 정책의 실행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의료 돌봄 비용을 줄이는 지원을 하고 있음. 교육과 노동시장,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을 시도하고자 함. 이민을 지원함.
- 자녀를 낳는 선택은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가족정책은 이에 맞도록 설계 및 집행되어야 하며, 평등이나 공정성과 같은 가치와 일치해야 함. 또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가족 정책은 사회적 실험이 아니므로 정책 설계 시 투명성과 책무성이 보장되어야 함.

⑤	
일 시	3.6 (목요일) 10:00 ~ 11:00
장 소	파리(OECD)
참석자	최선영(KIHASA), 함선유(KIHASA), Vincent Koen(OECD), Jon Prelieussen
<p><KIHASA-OECD 공동연구 결과 평가 및 향후 과제></p> <p>○ 공동연구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HASA 전문가의 작업과 OECD의 국제적 인구 및 정책에 관한 지식/정보가 잘 결합된 연구라고 평가됨. - 특히 OECD 발간 보고서에 비해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독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을 확인함. 	

- 향후 OECD의 타 지역 보고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한국 저출산 사례를 여성고용과 일-생활 균형 정책이라는 틀에서 분석하고, 이를 OECD 국가들 사이의 비교 등으로 확장한 것이 의미있음.
- 단행본 발간 세미나가 잘 기획되고 실행되어, 한국 저출산 사례의 국제적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에 큰 도움이 되었음.

○ 향후 과제

- 한국 저출산 사례는 국제적으로는 특이사례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추세로 이행하고 있는 여타 국가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OECD) 향후 일-생활 균형 이슈에 대해서도 심화된 주제를 선택하여 한국 내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KIHASA)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생활 균형 제도를 좀 더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음. 또한 노동시장 이중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유보적이며 향후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좀더 심도깊은 연구를 추진해야 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성 안에서의 정책과 이를 극복하는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를 확인함.

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 면담자 명함 등

① 회의 현장 사진





